



**송정역 코로나19 '철통 검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중국, 캐나다 등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직원을 따라 역사 밖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송정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광주시 특별행정명령에 따라 광명역을 거쳐 송정역으로 오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균형발전 외면한 재정배분 '빈익빈 부익부'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길을 찾다

- Ⓣ 불균형 시정 못한 지난 3년
- Ⓢ 광주·전남 미래재정도 암울
- Ⓤ 재정 분배기준 재설정 시급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대해 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세입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국고보조금이 모두 1조50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는 수도권에 4조7369억원, 영남권 3조379억원, 충청권은 1조1687억원 등을 더 지원했다. 가장 낙후한 지역이자 인구 감소,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는 호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상

호남, 나후·인구감소·고령화로 허덕... 지원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많은 수도권·영남권에 지원금 몰려 지역 불균형 더 심화

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이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해 살펴보면 호남은 3조3647억원으로, 충청권(2조8198억원)보다 증가액은 더 컸다. 그러나 수도권과 영남권의 증가액은 각각 9조3523억원, 6조3201억원으로 호남권을 압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혁신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광주일보가 지난 2016~2020년 5년간 재정공시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방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국가 재정의 불균형 지원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커졌고, 경제성·효율 등이 예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 일부 사업 예타 제외 등 나후지역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분권의 방향이 '지역낙후'보다 '지방소비'를 중시하면서 소비력이나 소비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지방의 지원 예산은 줄고, 수도권에 국가 재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재정분권 1단계로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방이양 및 재원 3년 한시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로 지방교부세의 지방분권세로의 전환, 지방소득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및 추가 지방 이양 등도 검토중이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특히 인구 감소가 현격한 도(道)를 중심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균특회계의 지방 이양이다. 농어촌 나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4년 신설된 이 특별회계는 호남권에는 '단비'와 같은 예산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균특회계의 절반인 3조6000억원을 지방소비세(지방세)로 이양하되 3년간만 과거 지원 규모를 보전해주

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년이 지난 2023년부터는 한시보전이 종료되면 소비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예산이 쏠리게 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주장이다.

전남과 전북은 당장 2023년에는 각각 4000억원, 2100억원이 감소하고, 서울과 부산이 2400억원, 19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를 지방분권세로 할 경우 나후지역 지원액이 감소하거나 지방소득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역시 지역 간 세입 격차가 커지는 방향이어서 전남 등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분권의 목표는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촉진"이라며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못한 재정 분권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5·18 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 지역 넘어 미래 통합 법안 만들어야

5·18을 국민통합의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5·18 진상규명법)'을 여야 공동발의를 통해 '과거와 지역'을 넘어 '미래와 통합'의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도 '호남과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여야가 광주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가자는 합의만 이룬다면 5·18 관련법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당 내부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및 진상규명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만들어 냈다면 이제는 여야 공동발의를 통해 광주의 아픔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가 원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시대의 아픔을 넘어 미래로 가자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관련법과 관련,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공세를 나서고 있어 여야 공동발의가 이뤄진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내에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가 서진정책 등 외연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도 5·18 관련법의 여야 공동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초선 모임 강연에서는 "호남이 왜 통합당을 외면하는지 고민해달라"고 지적하는 등 호남 민심에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은혜 대변인도 초선 모임 후 브리핑에서 "호남, 청년, 여성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적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며 비대위 차원의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5·18 가려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왜곡을 방지하는 법안에 민주당과 공동 발의에 나선다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민심 전반에 강력한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일부 세력의 반발 등을 넘지 못한다면 미래통합당의 변화와 혁신 주장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의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5·18 관련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민주당 측이 유연하게 미래통합당과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지도부 차원에서도 여야 공동발의에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미래통합당 개혁성향 초선 의원들과 접촉을 갖고 5·18 관련법의 공동 입법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5·18 관련법의 당론 법안 확정까지는 당 정책위의 검토와 의원총회 등 아직까지 1~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한·미 '김여정 담화' 대책 긴급 협의 중

북한이 남측을 비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를 휘감았던 화해 분위기가 2년 반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대립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외교 당국은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후 실무 간 협

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7일 전했다.

실무 협의는 한미 당국간 각급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 입장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전달된 점에 주목하고 그의 위상 변화와 그 무게감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는 '김여정 담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긴급히 협의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 사안에 관심을 두고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호남권 17년 만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각종 정부지원과 함께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광주로 도약할 것입니다.**

